

입양, 이렇게 어려워서야…

허가제로 절차 까다롭고 제출 서류 수십 건… 문의마저 줄어

특례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한건도 없어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막상 입양을 해 품에 안을 아이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새해 들어 입양을 마음먹고 관련 기관을 통해 아이를 찾고 있는 김모(43·광주시 동구 산수동)씨 부부는 최근 입양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입양 전 아이의 출생신고와의 무화됐고 허가를 받으려면 소득명세서, 범죄 경력 조회서 등 내야하는 서류가 수십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는 이 때문에 아예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입양을 문의하는 희망자가 줄고, 복잡한 절차와 겸증으로 입양 포기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특례법 시행 이후 유아 유기 사건도 늘고,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입양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지고 있다.

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직전인 7월 입양을 문의하는 건수가 반晌 높았다가 법률개정 이후엔 반도 안 되는 숫자로 떨어졌다. 또 입양이 성사된 건 수도 똑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회의 경우 한해 40건 이상이던 입양 건수가 확 줄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신청돼 계류 중인 1건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주지역의 또 다른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도 특례법 이후 겨우 9건의 입양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는 연 평균 50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법 시행 이후 입양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적으로 입양을 문의하는 비공식 루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포털사이트의 한 불임부부 카페에는 미혼모 등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

내야하는 상황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글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한 여성은 “입양센터에 전화하니 법이 바뀌어 아이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동의하지 않아 입양 보낼 수 없다”면서 신생아를 입양 보내고자 한다고 썼다.

광주 입양 기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은 아이를 국외로 보내지 말고 직접 양육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등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여러 조건들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기관에서도 입양이 의뢰된 모든 건수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했다”며 “일시적 감소일 뿐 제도가 정착되면 입양 건수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초라도 더…”

전남대 사범대 체육교육과 실기시험이 16일 오전 대학 체육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 여자 수험생이 안간힘을 쓰며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수위, ‘선택형 수능’ 논란 우려 표명

9개 사립대학 유보 입장에 교과부 재보고 받기로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취학 예정 아동은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4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학부모에게 16일 당부했다.

취학 예정 아동이 맞아야 하는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5차 ▲플리오(소아마비백신) 4차 ▲MMR(홍역·불거리·풍진 혼합백신) 2차 ▲일본뇌염 백신(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이다.

/연합뉴스

식약청은 16일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몰수제’ 등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선택형 수능 유보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이 내용이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없었다며 이 부분은 아래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인수위원들이 먼저 선택형 수능 논란을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보고할 것을 주문하자 내부적으로 당혹해하며 보고 자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예고대로 선택형 수능을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선택형 수능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우려를 표

수능의 시행 유보 주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데다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여러 차례 “인수위가 새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각 부처에 통보한 ‘7대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선인 공약에서 선택형 수능 관련 내용이 없었다라도 이 문제는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선택형 수능 유보에 대한 정부와 대학, 교사들의 의견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결국 최종 피해자가 수험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으며 13일은 176㎍/㎥, 14일은 156㎍/㎥, 15일 143㎍/㎥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대기중 미세먼지 지수는 135㎍/㎥의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미세먼지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날씨의 영향이다.

이번 현상은 한반도 상공에 북쪽 기압골이 통과한 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절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내 대기중 미세먼지 비상

농도 짙어져 호흡기 환자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광주 지역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측정돼 호흡기 환자 등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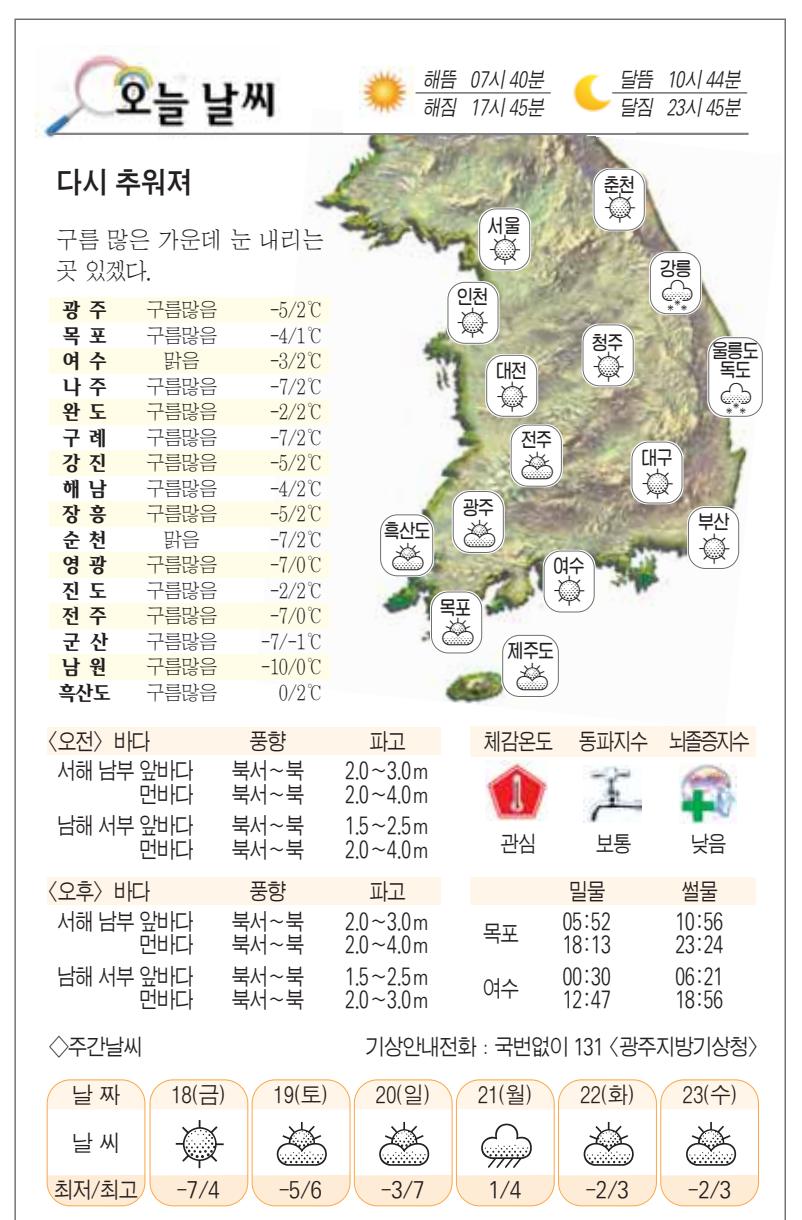
16일 광주기상청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광주시내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실제 광주기상청이 측정한 지난 12일의 대기중 미세먼지농도 167㎍/㎥(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이었으며 13일은 176㎍/㎥, 14일은 156㎍/㎥, 15일 143㎍/㎥로 조사됐다.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결과, 65세 이하 그룹 205명과 65세 이상 그룹 326명의 평균 생존기간이 각각 15개월과 11개월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전신상태가 비슷한 환자를 선정해 치료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각각 10개월과 3개월로 치료를 받은 그룹의 생존기간이 3배가 높게 나왔다. /연합뉴스



전남대 사범대 체육교육과 실기시험이 16일 오전 대학 체육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 여자 수험생이 안간힘을 쓰며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취학 예정 아동 입학전 예방접종 하세요

9개 사립대학 유보 입장에 교과부 재보고 받기로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취학 예정 아동은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4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학부모에게 16일 당부했다.

취학 예정 아동이 맞아야 하는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5차 ▲플리오(소아마비백신) 4차 ▲MMR(홍역·불거리·풍진 혼합백신) 2차 ▲일본뇌염 백신(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이다.

/연합뉴스

식약청은 16일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몰수제’ 등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선택형 수능 유보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이 내용이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없었다며 이 부분은 아래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인수위원들이 먼저 선택형 수능 논란을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보고할 것을 주문하자 내부적으로 당혹해하며 보고 자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예고대로 선택형 수능을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선택형 수능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우려를 표

수능의 시행 유보 주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데다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여러 차례 “인수위가 새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각 부처에 통보한 ‘7대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선인 공약에서 선택형 수능 관련 내용이 없었다라도 이 문제는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선택형 수능 유보에 대한 정부와 대학, 교사들의 의견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결국 최종 피해자가 수험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3월 취학 예정 아동은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4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학부모에게 16일 당부했다.

취학 예정 아동이 맞아야 하는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5차 ▲플리오(소아마비백신) 4차 ▲MMR(홍역·불거리·풍진 혼합백신) 2차 ▲일본뇌염 백신(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이다.

/연합뉴스

인수위, ‘선택형 수능’ 논란 우려 표명

9개 사립대학 유보 입장에 교과부 재보고 받기로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취학 예정 아동은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4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학부모에게 16일 당부했다.

취학 예정 아동이 맞아야 하는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5차 ▲플리오(소아마비백신) 4차 ▲MMR(홍역·불거리·풍진 혼합백신) 2차 ▲일본뇌염 백신(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이다.

/연합뉴스

식약청은 16일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몰수제’ 등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선택형 수능 유보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이 내용이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